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 맞불... 위기의 민생법안

주택청약법-데이터3법-민식이법, 폐기 기로에

정기국회 후 여야, 총선정국 돌입
부동산·경제 분야 가장 큰 타격
내년 6월 1.6만건 계류 법안 폐기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을 외면하면서 민생 법안은 벼랑 끝에 섰다. 오는 10일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경제·민생을 챙길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정기회 후 여야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정쟁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199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은 법안 대부분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내걸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

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국경색이 이어졌다.

여야의 의정활동 중단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가장 큰 분야는 부동산·경제 분야다. 정부는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한 바 있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 감정원이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청약자

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복안이었다.

합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해 감정원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말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금융·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의 처리도 불발했다. 특히 3법 중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업계는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았으나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불모로 잡혔다.

과거사 배·보상 안건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좌절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 마지막 노선은 사실상 올해가 끝이다. 내년 6월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현재 계류 중인 1만 6000건의 20대 국회 법안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조국 사태→타다 기소→김기현 하명수사

사라진 공조... 靑-與-檢, 3각 엇박자

민정수석실서 생산된 첩보 경찰청 전달
청와대 해명에도 여권·검찰 입장 차

'검찰개혁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12월3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와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을 시작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소' 사건 등으로 신경전을 이어온 갈등이 최근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경찰청에, 그해 12월 울산 경찰청에 각각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논란이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는 수습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령호

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 때 "김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에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 발언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해당 논란 집중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러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명수사 정황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자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백 부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은 28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달한 공식입장문에서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했다.

백 부원장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

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시점과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는 시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는 이러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편 하명수사 논란에 앞서, 여권과 검찰은 '타다 기소'로 갈등 구도를 보였다.

/우승준기자 dn114@

어르신~ 일자리 찾으세요?

맞춤형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희망자
이용방법 신분증, 이력서 지참 후 방문

사장님~ 시니어 채용 원하세요?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어르신을 무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 만 55세 이상 시니어 채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
이용방법 사업자등록증, 채용담당자 신분증 제출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TEL. 02.924.9433
FAX. 02.929.4661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6호선 고려대역 2번출구 도보 15분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할 나라빚 1400만원

10년 사이 2배로 증가...2028년 지금의 2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 만원을 넘어갔다.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9년 후인 2028년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이라 전망까지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을 찍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라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공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라빚이 증가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한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라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 204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09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대성 기자